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김병욱

B 한국블록체인협회

coindesk
KOREA

후원 UPbit

GOPAX

#HASHED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Fintech
Danal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병욱

 한국블록체인협회

 coindesk
KOREA

후원

 UPbit

 GOPAX

 #HASHED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Fintech
Danal

C · O · N · T · E · N · T · S

개 회 사

김병욱 국회의원 004

환 영 사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006

기 조 발 표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008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KYC/AML 실태와 문제** 018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 032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종 합 토 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테스크 코리아와 함께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오갑수 블록체인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주실 발제 및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과 불안이 심화 되던 지난해 3월 가상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을 제가 대표 발의하여, 올해 드디어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시행령 개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에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분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국회 내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가상자산의 독립적인 일반법 제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역사를 만드는 시조가 되는 것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한 명언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은 신대륙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오늘 발제되는 내용과 토론회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향후 정부에서 마련할 시행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에 신대륙의 발견과 맞먹는 큰 성과를 안겨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첫걸음이 될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코인테스크 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30.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 병 욱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코인데스크코리아 유신재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김병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과정에서 규제 당국과 국회, 특히 김병욱 의원님의 적극적 지원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동법 시행령 위임사항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하여 입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김병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함께 해주시는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장참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발대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한은 법률자문단은 CBDC와 관련된 법적 이슈와 법률제,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이뤄질 외부 연구 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이 일부 지역에서 CBDC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위기로 몇 년 뒤에 맞게 될 디지털세계의 미래를 지금 눈 앞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미중유의 팬데믹 위기에도 Amazon 등 Tech Giant는 중앙집중의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이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어느 나

라에서도 이에 경쟁할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은 이에 대한 Decentralized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현재 기업 등 민간부문과 함께 정부에서도 업무 혁신과 비용절감 및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금융, 유통과 공공서비스분야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는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성장해 나아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촉진하여 발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며 혁신을 유발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금융, 사회, 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혁신적 변화를 가져와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국제경쟁력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가 기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금법 시행령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시장이 잘 규제된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에도 현장에서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 협회와 함께 자율적으로 노력해온 산업계 및 시장참여자, 그리고 이 분야에 관한 법과 제도의 연구를 하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과 감독당국 관계자의 귀중한 지혜와 제안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제도를 정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본 협회 특금법 시행령 TF를 이끌고 있는 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이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두나무의 황순호 팀장이 가상자산사업 실무 차원에서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현황에 대하여, 그리고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선스와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금융정보분석원 고선영 사무관, 다날핀테크의 김영일 팀장, NH농협은행 류창보 파트장이 토론에 참여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하여 지혜로운 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6. 30.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오갑수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김·장법률사무소 선임미국변호사)


특금법시행령 개정 방향: 가상자산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

2020. 6. 30.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종구
(김·장법률사무소 선임미국변호사)

 한국블록체인협회

목차

- I.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의의
- II.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제안사항
- III. 시행령 개정시 유의사항

 한국블록체인협회


I.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의의

 한국블록체인협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의 의의 (2020. 3. 공포)

-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 FAFT에서 각국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ML규제만을 위한 입법의 한계
 - ✓ 단, 자금세탁/불법금융거래 등에 대한 일반 국민 및 당국의 우려와 규제공백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 및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주요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FIU가 효과적인 AML규제체계를 완비하기를 기대

4 |  한국블록체인협회

II.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제안사항

한국블록체인협회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범위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안사항] 발생 가능한 자금세탁 위험의 수준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범위 확정 필요

- ✓ (FATF)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시 유형별 특성 및 사업의 기능과 금융거래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주요 국가의 입법례에 따르더라도, 거래소 및 수탁보관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한정

6 | 한국블록체인협회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안사항] ISMS 인증요건은 고객의 예치, 수탁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한정

- ✓ ISMS 인증은 본래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의 자산 보호 및 피해 예방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고객 자산을 예치, 수탁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 효율적

[제안사항] 실명확인계정 요건은 원화거래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한하여 한정

- ✓ 실명확인계정은 법문상 정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7 | 한국블록체인협회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제안사항] 법률 위반은 자금세탁방지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법률로 한정

- ✓ 본 결정사유를 둔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목적임을 고려

8 | 한국블록체인협회

3. 실명확인계정 개설 주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9항

금융회사등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사항] 실명확인계정 개설주체를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으로 구체화

- ✓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충분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좌의 개설 주체를 반드시 은행법상 은행에 한정할 필요가 없음
- ✓ 추후 가상계좌 방식보다 실명확인 내지 자금세탁 방지에 더 용이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정 방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실명확인계정 개설 기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9항

금융회사등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사항] 실명확인계정 개설의 객관적인 기준 내지 절차를 설정

- ✓ 법률 입법 당시 국회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명확인계정 개설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였고,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의 취지가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
- ✓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필수적

4. Travel Rule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제1항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3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안사항] 국제표준 마련 시점까지의 시행 유보 / 수취인 정보는 보관의무 부여에 한정

- ✓ 국제적인 표준 마련이 필수적이며, 국내에 한정된 메시징 표준 마련은 큰 의미가 없음
- ✓ 시행을 유보하되, 유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자산 특성상 수취인 정보의 검증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송금인이 제공한 수취인 정보의 보관의무에 한정하여야 함

5. 기타 제안사항

1. 신고사항(제7조 제1항)

- ✓ 신고사항을 사업장 주소, 이메일,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로 한정
 - 신고사항을 둔 취지와 타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2. 변경신고(제7조 제2항)

- ✓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신고
 - 사후신고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문언상으로도 사후신고가 원칙

3. 신고 유효기간(제7조 제6항)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
 - 불필요한 절차의 방지와, 수리 거부가 예상되는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고려

5. 기타 제안사항

4. 직권말소 절차(제7조 제4항)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시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마련
 - 행정절차법 규정을 고려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관한 규정 마련할 필요성

5. ISMS 유예기간(제7조 제4항)

- ✓ ISMS 인증 요건 적용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
 - 인증기관의 업무 집중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설정이 바람직

6. 가상자산사업자 조치(제8조)

-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 기록을 별도 관리
 - 집금계좌의 불투명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분리 관리의 방법을 명시

5. 기타 제안사항

7. 고객확인제도(제5조의2 제1항)

- ✓ 고객확인시 주민등록번호와 CI값 병용
 - 법률상 의무 준수 및 규제 당국의 요청 고려하면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등록번호만 활용할 경우 실무상 부담이 상당
 - 만일 주민등록번호만 활용할 경우,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 필요



III. 시행령 개정시 유의사항

시행령 개정시 유의사항

시행령 안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 마련 필요

- 가상자산의 특성 및 관련 산업의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업계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상존
→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산업 발전 측면도 고려할 필요
-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
→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의견 교환 필수적
→ 원칙에 입각한 개정작업 요망: 일관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 가상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종국적으로는 업권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

기조발표 ②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암호화폐 KYC/AML 실태와 문제

황 순 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AML/CFT 운영 현황과 제언]

두나무 주식회사 황순호
2020.06.30

I 자금세탁 방지제도

II III

UPbit

Table of Contents

I. 자금세탁 방지제도

II. 금융기관의 AML/CFT

III.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AML/CFT

1. 자금세탁 방지제도란?

I. 자금세탁 방지제도 II III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세탁에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탈세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 또는 요청하는 행위
- 관련범죄 : 조세포탈, 사기·횡령·배임, 주가조작, 상습도박, 마약류 범죄, 뇌물공여 등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 행위의 예방/적발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프로세스·시스템을 갖추고 그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것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 금융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국내·국제 협력을 위하여 이들 시스템과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함

UPbit

3

2. 글로벌 규제(FATF)

I. 자금세탁 방지제도 II III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권고안 발표

FATF 가상자산관련 지침서(Guidance) 발간



목차

- 섹션 I : 소개(Introduction)
- 섹션 II : FATF 권고안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관련 활동과 VASP의 범위
- 섹션 III : 국가 및 관할 당국의 FATF 권고안 적용 방안
- 섹션 IV : VASP 및 가상자산 관련 활동 수행 기관에 대한 권고안 적용 방안
- 섹션 V : 가상자산 및 VASP에 대한 AML/CFT 적용 방안 예시(국가 별)

주요 내용

- FATF 용어집에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및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정의 추가
-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에게 가상자산 송수신자의 신원을 확인 하는 등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RBA적용, CDD수행, ML/TF 위험 완화방안 마련, AML/CFT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 감독당국에게 가상자산 취급 인허가(라이선스 발급), 가상자산취급자 등록,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 감독, 모니터링, 제재 등 의무 부과

UPbit

4

1. 자금세탁 방지제도 – 국내 규제의 변화

I. 자금세탁 방지제도 II III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규제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직접규제로 변화

기존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규제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간접규제 형태로 '18. 7.10부터 시행
 - 입/출금계좌에 대한 통제가 핵심
- ✓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디지털자산 거래소) 의무
- ✓ 입/출금 계좌에 대한 관리 의무
- ✓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
- ✓ 내부통제 강화
- ✓ 의심거래의 거절

향후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 규제

-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포함되어 직접 규제
- ✓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중개 매매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지정(고객확인 의무 등)
- ✓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정보제공 거절 시 금융거래 즉시 거절
- ✓ 고객 예탁/거래금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자산과 구분 관리
- ✓ 가상자산사업자 정보에 대한 FIU 신고 및 신고내역 공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어 직접 규제 강화 예정

UP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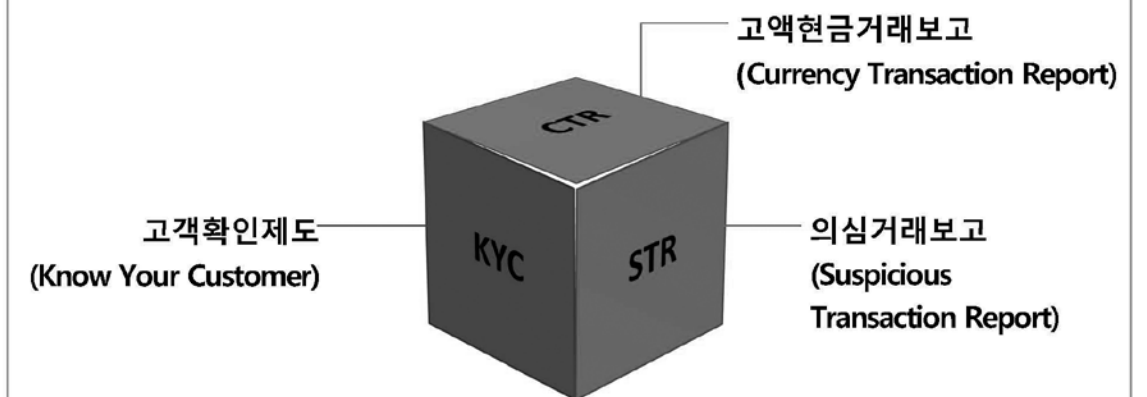
5

I II 금융기관의 AML/CFT III

UPbit

1.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요

I II. 금융기관의 AML/CFT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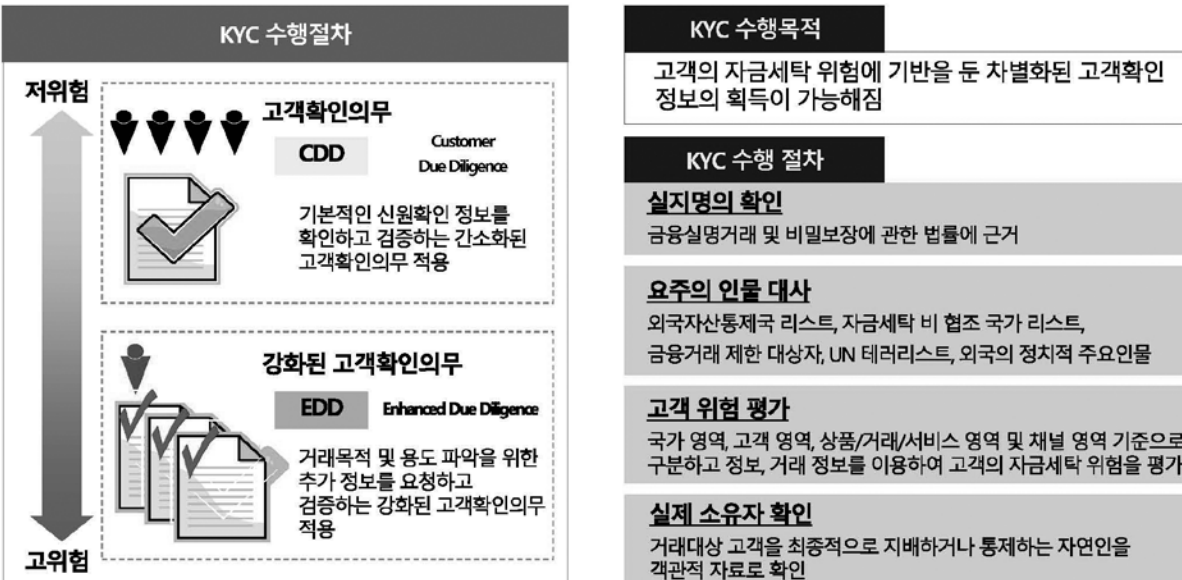
UPbit

7

1.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 확인

I II 금융기관의 AML/CFT III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고 신원을 확인/검증하는 제도로서 고객의 자금세탁관련 혐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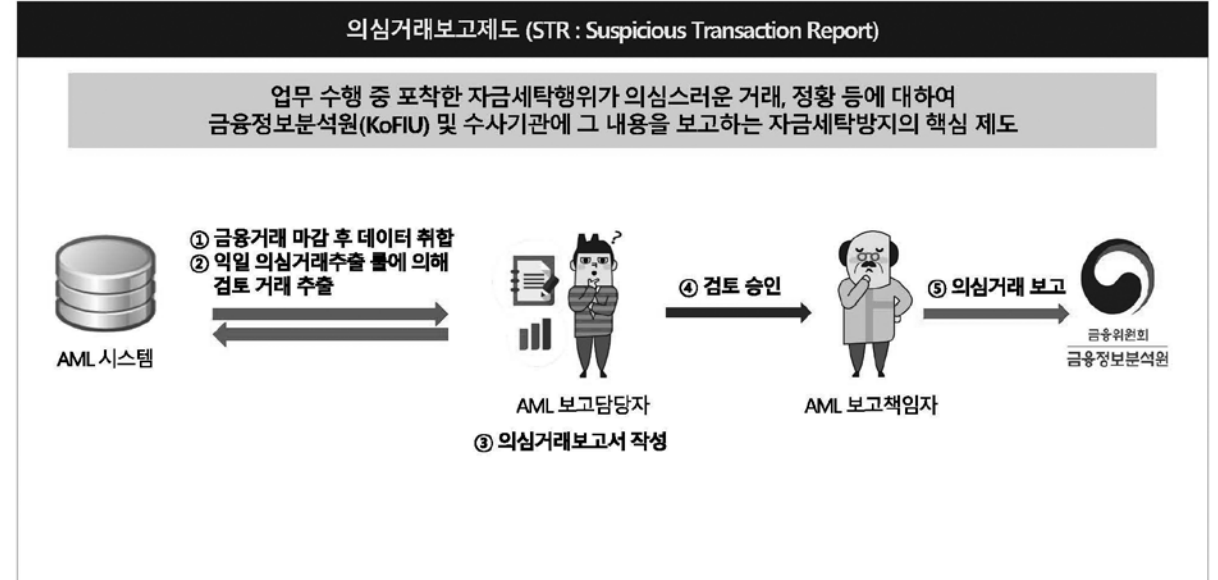
UPbit

8

3.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의심거래보고제도

I II 금융기관의 AML/CFT III

의심스러운 고객/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제도



UPbit

10

2.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 고액현금거래보고

I II 금융기관의 AML/CFT III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UPbit

9

I II III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AML/CFT

UPbit

1.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 확인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고객 확인을 위한 핵심 인증 수단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출금 한도 상향을 위한 추가 확인 절차는 상이하게 운영

A거래소	B거래소	C거래소	D거래소
Step1 SNS 계정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톡을 통한 로그인 및 약관동의 	Step1 회원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일반회원가입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휴대폰 인증, 거주지 인증)) 	Step1 개인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Step1 이메일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 인증 및 가입 목적 확인 후 약관 동의
Step2 이메일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중인 이메일 인증 	Step2 본인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비대면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는 수집하지 않음) 제출 중 택 1 	Step2 이메일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중인 이메일 인증 	Step2 휴대폰 본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 인증
Step3 휴대폰 본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 인증 	Step3 입출금 계좌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KRW 입출금 계좌 인증 	Step3 휴대폰 본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 인증 	Step3 계좌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은행 계좌 인증
Step4 입출금 계좌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KRW 입출금 계좌 인증 	Step4 추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약서 작성 + 비대면 신분증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는 수집하지 않음) 	Step4 은행 계좌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은행 계좌 인증 	Step4 추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금 상향을 위한 관련 서류 업로드 및 검증
Step5 2채널 추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카오톡을 통한 추가 인증 	Step5 거주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인증 후 출금한도 상향 	Step5 OTP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OTP 앱 다운 및 앱 등록 	<div>회원 가입 단계 (일부 거래 제한)</div> <div>코인/원화 입출금을 통한 거래 가능</div> <div>한도 상향을 위한 선택 절차</div>
Step6 거주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인증 후 출금한도 상향 			

UPbit

12

1.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확인제도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고객정보 수집의 근거 법령 부재로 KYC 수행 한계

• 휴대폰 인증 및 입출금 계좌 인증으로 실질적인 고객확인 절차 운영

- ✓ 휴대폰 인증 및 계좌 인증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내외국인여부, 금융기관 계좌번호) 취득
- ✓ 성명,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왓치리스트로 거래 회원 전체에 대해 요주의 인물 여부를 매일 필터링
- ✓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한 이용자는 금융권의 KYC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
- ✓ 출금한도 상향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거주지 인증 절차를 EDD 차원에서 수행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문서만을 징구하여 검증된 값을 수집
- ✓ 법인 회원에 대해서는 대면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내방하여 대면 KYC 진행
- ✓ 비거주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

• 고객 위험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의 한계

- ✓ 회원 가입 시에 확보한 정보에 의존하여 고객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수집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유의미한 고객 위험 평가 한계
- ✓ 이용자의 측면에서 가입절차가 간편한 거래소를 선호하므로 고객 위험 평가를 위해 타 거래소 대비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UPbit

14

1.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 확인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주요 거래소의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폰의 점유 인증을 기본 KYC로 하며 신분증과 얼굴 사진으로 추가 인증

E거래소	F거래소	G거래소
Step1 이메일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 인증으로만 거래 및 1일 2BTC 출금 가능 	Step1 이메일 또는 휴대폰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이나 휴대폰 인증으로만 거래 및 1일 0.1BTC의 출금 가능 	Step1 이메일 또는 휴대폰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메일이나 휴대폰 인증
Step2 신원확인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국적, 거주지,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 	Step2 신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사진 업로드 성명, 고유인식번호(실명번호) 입력 	Step2 신원확인정보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국적, 거주지, 신분증 종류 입력
Step3 신분증 및 안면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및 얼굴 촬영 	Step3 고급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사진 업로드 자필 서약서를 든 사진 업로드 	Step3 신분증 및 안면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업로드 얼굴 정면 사진 업로드
Step4 추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신분증 상의 주소지 입력 		Step4 추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 촬영

UPbit

13

1.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확인제도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고객정보 수집의 근거 법령 부재로 KYC 수행 한계

•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현행 법령에 따라 회원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에 의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회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20. 8. 5. 시행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1조 4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해야 함
-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 사업자등록증상의 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UPbit

15

1. KYC(Know Your Customer) - 고객확인제도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디지털자산 거래 고객정보 수집의 근거 법령 부재로 KYC 수행 한계

-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신분증 정보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진위여부 확인 가능

-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계좌개설 업무에 한해서 제공
-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KYC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닐 경우, 실시간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초래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필요

UPbit

16

3.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과제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AML/CFT 운영 현황과 제언

-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 부족

- ✓ 디지털자산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발생 우려가 높고, 거래금액 또한 상당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담 인력이 필요
- ✓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늦어지면서 AML 경력자 유치가 어려움

-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부재

- ✓ 현재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교육과정이 부재하여 기존 금융권의 AML 교육에 의존
- ✓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인력 및 시스템 구축 필요

- 당국의 규정 및 지침 마련 시급

- ✓ 자금세탁 방지제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의 조속한 제정 필요

UPbit

18

2.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의심거래보고제도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의심거래 포착 시 보고 경로 부재

-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포착하여도 보고 경로 부재

- ✓ 거래소 내 거래 모니터링 시 자금세탁 혐의 거래가 포착이 되면 업비트와 연동된 실명확인 가상계좌 제공 은행을 통해 STR 보고가 가능(보고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나 해당 회원이 해당 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원화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보고하기가 어려움

- 자금출처 확인 제도 운영

- ✓ 업비트 자체 물에 의해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거래 전 회원에게 확인하는 절차 운영 중
- ✓ 소명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거래 거절
- ✓ STR 보고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업비트 자체 기준에 따라 거래거절을 하고 있으나, 소명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의 시세가 급변하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특금법 시행 전이라도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경로 마련 필요

UPbit

17

4.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노력

I, II, III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AML/CFT

거래소 자체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운영

- 고객확인제도

- ✓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왓치리스트로 거래 회원 전체에 대해 요주의 인물 여부를 매일 필터링
- ✓ 법인, 외국인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한 대면 KYC 진행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사용

- ✓ 디지털자산 추적 및 입출금 주소의 위험도 확인, 범죄와 관련된 IP 식별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도입

- 자금세탁 방지 제도 조기 구축

- ✓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컨설팅을 거쳐 내부통제제도를 정비
- ✓ 컨설팅 산출물을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AML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완료
- ✓ 구축 완료 이후부터 현재 수집하는 고객 정보와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 제도 시행 전까지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은 시스템에 즉각 반영 예정

UPbit

19

맺는 말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 KYC)

-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명시
-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

- 특금법 시행 전이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경로 마련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효과적인 AML 이행을 위해 보다 명확한 제도 마련 필요

감사합니다.

기조발표 ③

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FATF가이드선스와 해외 사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바른 한서희 변호사



1

I. FATF와 VIRTUAL ASSET 규제



3

목차

I. FATF 와 Virtual Asset 규제

FATF Guidance 의 주요내용
가상자산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
Recommendation 15 : binding measures
TRAVEL RULE

II. 해외 사례 및 향후 전망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 관련
해외 사례와 특금법 개정안의 비교
향후 입법절차



2

1. FATF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Guidance”

- FATF 권고안이 발표되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Guidance”
- FATF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상황임
- 특금법 개정안과 FATF 권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개정 특금법 시행령에 담겨질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1. FATF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Guidance”



BARUNI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5

2. Virtual Asset

- 1)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되고
- 2) 지급이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 3) 가치의 전자화된 표시 (법정화폐, 증권 등 제외)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or transferred and 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

Do not include digital representations of fiat currencies, securities, and other financial assets that are already covered elsewhere in the FATF Recommendations

BARUNI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7

1. FATF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Guidance”

FATF 규제의 주요 내용

- ✓ 한국 2009가입, 회원국 37개국
- ✓ 주기적 이행평가, 미이행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 회원국자격박탈
- ✓ 2012년 Recommendation 40개 분류
- ✓ Recommendation 15 - New Technologies

BARUNI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6

3.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 사업자의 핵심 요소

1. 영업으로 할 것
2. 고객을 대신하여 행위(on behalf of)
3. 가상자산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편의를 제공(facilitating)하는 자

다른 자연인, 법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1. 가상자산과 법정통화간의 교환(exchange)
2. 한가지 이상의 가상자산 간의 교환(exchange)
3. 가상자산의 이전
4. 가상자산 과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의 보관, 관리
5.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자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참가하거나 그를 제공하는 것(ICO 또는 IEO 관련)

BARUNI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8

3.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이드선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상자산 교환 및 이전 서비스
-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 ↔ 법화, 다른 가상자산, 귀금속 간 교환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서비스
- 사업모델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자산 등 여러 지급수단을 수용
- 키오스크 제공자(예 : bitcoin ATM, 벤딩머신)
- 가상자산 에스크로 서비스(스마트계약 기술 관련 서비스 포함)
- 중개서비스(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를 촉진)
- 주문체결서비스(order-book exchange service)
- 선진 거래서비스(가상자산 포트폴리오 매입, 마진 거래·알고리즘 거래 등)
- 가상자산 지갑 제공자 : 지갑 관리자(host), 다른 자연인 및 법인의 가상자산/지갑, 개인키에 대한 보관·통제하는자 등

4. Recommendation 15

Recommendation 15

- ① 국가는 가상자산활동과 VA서비스제공자 영업에서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위험을 파악·평가하여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 AML/CFT 예방조치를 이행하는지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한 허가 및 등록제 등을 도입해야함
- ② 국가는 VASP에게 라이선스 또는 등록 요구할 수 있고
✓필수적 요건, 라이선스 없는 영업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함
- ③ 범죄인이 VA 서비스 제공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함

3.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이드선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 P2P 개인간 거래 플랫폼
-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자신을 위해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항공마일리지, 신용카드 포인트(award) 등
- 단순 S/W 개발업자, 지갑 제조업자 및 비 보관 지갑 등

4. Recommendation 15

Recommendation 15

- ④ 기존에 라이선스나 등록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라이선스나 등록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 ⑤ 국가는 VA서비스 제공자가 AML/CFT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함
✓규제당국이 이행해야 함 (자율규제 기구 불가)
✓VA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의 AML/CFT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해야 함

4. Recommendation 15

Recommendation 15

- ⑥ 국가는 유효하고 적절하며 억제력 있는 형사, 민사, 행정적 제재를 규정해야 함
 ✓ VA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그 이사회 구성원과 고위집행임원에 대해서 까지 규제
- ⑦ (a) CDD (고객 확인 의무) - 대상 거래는 USD/EUR 1,000 이상 금액
 (b) 국가는 Travel Rule 준수하도록 해야 함.

송금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송금자 정보, 수령자 정보를 수집, 보관
2. 수취서비스제공자에게 즉시 제출
3. 관계당국의 요구 시 제출

수취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송금자정보, 수령자 정보를 수령, 보관
2. 관계당국의 요구 시 제출

- ⑧ 국가들은 가능한 가장 넓게 국제적 공조해야 함
 ✓ 감독당국들은 외국의 당국들과 정보교환

II. 해외 사례 및 향후 전망

5. TRAVEL RULE

TRAVEL RULE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의 의무 : 가상자산의 이체에 있어 정확한 송금인 정보 및 수취인 정보를 획득하여 보유해야 하고, 이 정보를 수취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금융기관에게 즉시 제출하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가 파악해야 하는 거래 당사자의 정보는

- ▲ 보내는 사람의 성명
- ▲ 보내는 사람의 계정정보 (e.g. 가상자산 지갑주소)
- ▲ 보내는 사람의 물리적 주소 : 국가가 발급한 신분확인번호 또는 송금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객확인번호 또는 생일 및 출생지(우리나라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 ▲ 받는 사람의 성명
- ▲ 받는 사람의 계정 정보(e.g. 가상자산 지갑주소)

1.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 관련

미국

- 연방정보차원의 FinCen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of 1980)상의 자금 이체업자로 보고 MSB(자금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통일법위원회는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License를 받아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뉴욕주에서는 다음 사업자에 대하여 Bitlicense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 라이선스 없이 업무 수행을 금지함.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가상자산 전송 및 전송을 위한 수신행위를 하는 자
 - ✓ 타인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저장 및 유지 행위를 하는 자
 - ✓ 고객을 위한 가상자산 구매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자
 - ✓ 고객을 위하여 교환업을 수행하는 자
 - ✓ 가상자산의 관리 또는 발행을 하는 자

1.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 관련

영국

-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2020. 1. 10.부터 암호자산사업자 등록제 시행
 - ✓ 암호자산 거래소,
 - ✓ 암호자산 ATM
 - ✓ 커스터디 지갑서비스 제공자
 - ✓ P2P 서비스 제공자
 - ✓ 새로운 암호자산 발행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공자

2. 해외 사례와 특금법 개정안의 비교

특정금융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
 - ✓ ICO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블록체인 기반 선불전자지급업자 등
- 취급 가상 자산의 범위 및 절차?
 - ✓ 뉴욕주 Bitlicense의 경우 가상자산 기준을 먼저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 자산 취급대상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음
 - ✓ 반면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마다 등록을 하고, 등록된 가상자산만 취급이 가능함
- 신고제 요건?
 - ✓ ISMS인증 및 실명인증제와
- 트래블러 이행의 현실적 범위는 어디까지?

1.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 관련

유럽연합

- 2018. 4. 발표된 제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절차,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의무화 함
-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범위에는 거래소, 자금 보관형 월렛 (custodian wallet) 제공업체가 포함됨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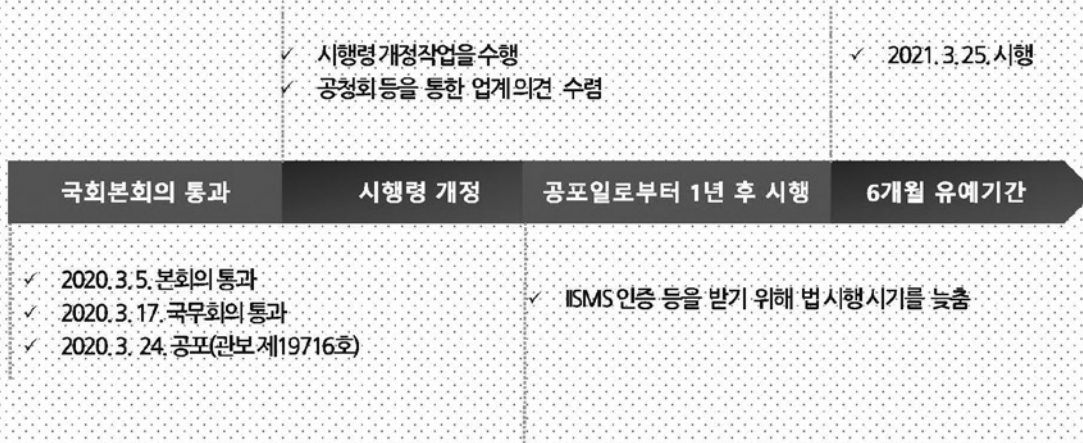
-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적용됨
- 자금결제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청에 등록을 해야함
- 2020. 2.부터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 가상자산 변경시 사전신고제 도입, 과도한 광고 규제 도입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률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적용됨
- 거래 이용자 확인, 거래기록 7년 보존, 의심거래 신고 등을 의무화 하고 있음

2. 해외 사례와 특금법 개정안의 비교

특정금융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신고제 요건?
 - ✓ ISMS인증 및 실명인증제와
- 트래블러 이행의 현실적 범위는 어디까지?

3. 향후 PROCESS



감사합니다

변호사 한서희
EMAIL: SUHHEE.HAN@BARUNLAW.COM
TEL: 010-3017-6255 / 02-3479-2351

종합토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황순호 두나무 대외협력팀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류창보 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

특금법 시행에 따른 비 거래소 VASP 대비 현황

김영일 다날핀테크 사업전략팀장

비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대비 현황

1. KYC를 기반으로 한 Sanctions Screening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Sanctions Screening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비교적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List 내 존재 여부 및 입력한 정보의 Score matching 정도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판단 지표가 존재함
2. STR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이해도가 부족함
 - STR의 특성 상, 의심 거래에 대한 Know How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의심거래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표가 존재하는 Sanctions Screening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음
3. 기존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거래의 차이에서 오는 STR 탐지 시나리오가 없음
 - 토큰단위로 자산을 분할하거나, 소수점 단위 이하로 조개어 자산의 이동을 처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STR 탐지 시나리오가 필요함
 -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으며, 거래 금액이 낮은 비 거래소 VASP들은 Know How를 축적하고 거래를 분석하기 위한 Raw Data 확보가 어려움
 -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STR 사례를 공유하고 대비 하기 위한 솔루션 및 장치들이 존재하지 않음

- 기존 금융권의 STR Know How 전수 필요 - 비 거래소 VASP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STR 시나리오 수립 필요 - VASP들이 각자의 STR Know How를 공유하기 위한 공조 솔루션 필요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VASP의 시행령 반영 요청 사항

1.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KYC 수준의 차등 적용
 -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일반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의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 수준에서 결제 서비스 가입을 제공하고 있음
 - VASP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고객의 KYC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본인확인가상계좌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 개정안 제 7조 3항 중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
3. 국내 사용자의 경우, CI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이에 따른 KMS 인증 요건 한정
 - 현재 사용자 인증 시 획득하는 CI를 활용한 FID 신고 가능 시, VASP의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짐
 - 이에 따라, CI를 활용하여 VASP의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
 - KMS는 인증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 수준 이상 수집하여야 하는 (혹은 수집하고자 하는) VASP에 한정하여 인증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4. Travel Rule 준수
 - 가상자산의 특성 상 수신자(수취자)의 정보를 검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함
 - 따라서, 수신자(수취자)의 정보를 입력 받고 STR 신고 등에 활용하되, 수신자 정보의 검증 의무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한 특금법 준수는 매우 중요함
단, 실제 서비스와 연결되는 비 거래소 VASP들의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령이 수립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Fintech
Danal

특금법 시행에 따른
비 거래소 VASP 대비 현황

©2020 DanalFintech Co., Inc.

농협은행 블록체인팀에서 바라보는 특금법

류 창 보 농협 디지털R&D센터 파트장

*본 의견은 농협은행을 대변하는 의견이 아닌 블록체인 담당조직의 의견으로, 신사업 추진관련 내부문서를 요약한 자료

1. (검토배경)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 가시화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향후 주요 정책이슈 및 중장기 시장변화 예상

구분		단기 (~21.03월)	중기 (~21.04월~22년)	장기 (23년 이후)
주요 정책 이슈	특금법	(21.03월) 개정법령 시행	(21.09월) 기존사업자 신고 완료	지속적 개정
	과세	(20.07월)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중기예상)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법령 시행
	CBDC	(20.12월) 업무요건분석·기술 검토 및 컨설팅 완료	(21.12월) 파일럿 테스트 완료 (중기예상) 은행 시스템연동 완료	CBDC 상용화
중장기 시장변화 예상		기존사업자 구도 재편 시중은행 기술·시스템 도입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디지털자산 플랫폼 경쟁 심화 시중은행 CBDC 대응 준비	일부 플랫폼 사업자 생존 및 시장주도

2. 영향도 분석

- (시장구도 재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특금
법상 신고수리건 미충족 사업자는 사업영위 불가
- *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추가계약에 대한 당행 입장은 부정적

- (가상자산 수탁업 출현 및 경쟁) 타행의 경우,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기술을 연
구하고 관련사업을 구체화 중
- ⇒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하는 수
탁업을 신사업으로 접근 필요

3. 추진계획

- (권소사업 구성) 전문성 보완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참여사	R&R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소, 커스터디, 송금, 펀드 등 신규 비즈니스 영역 법률 및 정책자문
(주)핵슬라트	블록체인 기술 자문 및 블록체인 인프라 담당

- (추진현황) 가상자산 수탁범위, 수익모델, 운영방식(인하우스 또는 독립법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연구 중 ⇒ 결과물에 대해서 연내 PoC 수행 계획



DAXPO 2020

9월 3일(목)~4일(금) |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www.coindeskkorea.com/daxpo



